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의 마중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4.20일부터 신청 접수

- 시범사업 대상지로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5개 군 선정 예정
- 5월 중순경 선정된 군에는 '26.7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6~'27년)에 참여할 군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아 5월 중순경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추가공모 신청서 접수 기간: '26. 4. 20. ~ 5. 7.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군(郡)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정책이다.

이번 공모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郡) 중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5개 군(郡) 내외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절차와 평가지표를 유지하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만큼 재원 투입 능력, 추진 의지 등에 대해서는 보완된 기준을 수립하였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선정된 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2026년 7월부터 개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 정책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 내 소비를 통해 경제를 선순환시키고 지역이 균형 발전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함으로 농식품부는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농어촌을 사람이 돌아오고 머물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시키고 지역의 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에도 인구 유입, 지역상권 회복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추가 대상지역을 신속하게 선정해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려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 2.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계획
- 3. 시범사업 추가공모 대상 지역

담당 부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촌소득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희중 (044-201-2811)
		담당자	주무관	현선경 (044-201-2818)



- **(사업 목적)**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 유도
- **(추진 방향)** 인구감소지역* 군(69개) 중 공모를 통해 지역 여건,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군 대상 2년간('26~'27) 시범사업 추진
 - 대상 지역에서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 활력이 증진되도록 정부·지자체가 함께 지역경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노력 병행
 - 대상 지역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 정책효과 모니터링을 토대로 본사업 방향 검토
- **(지원 내용)** 일정 기간(30일)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사용지역)** 거주 지역 내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은 여러 개 면 또는 읍·면을 생활권으로 지정하여 사용 가능
 - **(사용처)** 중심지(읍)·특정업종에서의 사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되, 생활권 형태별로 사용처 설정
- **(예산)** 인당 월 15만 원 지급 기준 '26~'27년간 시범사업 총사업비 약 1조 7,057억 원*(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

* 인구 1만 명당 총사업비 360억 원 소요로 약 52.5만 명(약 15개 군) 지급 가능 규모

- **(자격)**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 군*

* 인구감소지역 지정('21.10) 69개 군 중 시범사업 진행 중인 군 제외 59개 군

- **(공모 방법)**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은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을 사전 협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계획 수립 후 신청

- 광역자치단체(시·도)는 기초자치단체(군)의 사업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취합·검토 후 제출 기간 내에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제출 기간: '26. 4. 20.(월) 09시 ~ 5. 7.(목) 18시(기한 경과 제출 서류 불인정)

** 수신처: 온나라 전자결재 공문(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및 이메일(hyeonsseon@korea.kr)

- **(평가 및 선정 계획)** 지방정부가 새로 제출한 공모 신청서, 예비계획서 등에 대한 서류 및 발표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합산 점수 고득점순으로 국비 범위(6개월 706억 원, 약 19.6만 명 규모) 내에서 5개 군 내외로 선정

*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가점을 제외한 점수가 높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가점 제외 점수도 동일한 경우 공통 배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높은 대상지를 선정

- **(향후 일정)** 서류·발표평가(5.8~5.12 잠정) 후 선정 결과 발표(5.14 잠정)

- **(관련 문의)** 담당자에 이메일(온메일) 또는 유선 연락

* 담당자 : 농촌소득정책과 현선경 주무관(hyeonsseon@mail.go.kr, 044-201-2818)

붙임 3

시범사업 추가공모 대상 지역

◆ 인구감소지역 69개 '군(郡)' 중 시범사업 실시 중인 10개 군 제외 **59개 군**
 ※ 인구감소지역 지정 : 시·군·구를 대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 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 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장관이 지정 고시

시·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郡 한정, 현재 시범사업 실시 군 제외)
대구 (1개)	군위군
인천 (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1개)	가평군
강원 (9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4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충남 (5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5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임실군, 진안군
전남 (14개)	강진군, 고흥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9개)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9개)	거창군, 고성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0개 시도 59개 군	